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오는 7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을 앞두고 제주에서 설명회를 연 가운데 4·3 유족들이 ‘제주 분원’ 설치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허호준 기자 지난 4년 동안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는 활동을 해온 4·3트라우마센터가 오는 7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분원’으로 출범하면서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하던 5·18트라우마센터와 4·3트라우마센터의 치유 활동을 이달 말 끝내고 한달의 정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국립센터)로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센터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사무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국립센터 본원이 광주에 설립되고, 제주에 분원이 설립되는 데 대해 프로그램 등 기능과 규모 축소 우려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은 “국립센터로 다시 문을 열면 조직이 확대되고 역량이 강화돼야 하는데, 광주 본원에는 연구와 지도, 조사, 상담, 치료, 재활 기능 등을 갖추고 있지만, 제주 분원은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만 역할을 하고 있다”며 “희생자 수가 제주4·3은 1만5천여명이나 되는데 왜 제주가 분원으로 운영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호준 국립센터 원장은 “본원과 분원은 어감도 다르고 할 일도 다르다”며 “제주와 광주는 상황이 다른 측면이 많아 독자 설립을 하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주도에 본원을 별도로 설치하려면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제주에 분원이 설치된다고 해서 홀대하는 것은 아니고 규모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제주4·3트라우마센터는 2020년 5월 문을 연 이후 1년에 평균 1만6천~1만7천여건에 이르는 이용 건수를 보였다. 그만큼 치유 대상자가 많기 때문이다. 4·3 관련 치유 대상자는 4·3 유족(1만5566명), 희생자 며느리(3251명), 생존 희생자 후유장애인(84명), 수형인(19명) 등 1만8920명이다. 또 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 주민(2170명)도 치유 대상자에 포함돼 전체 대상자만 2만1천여명에 이른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결정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은 현재 희생자 1만4822명, 유족 11만494명이다.